

특정 폐기물 처리장 3곳 분산

환경처, 수도권·김포·시화공단에

환경처는 지난달 10일 수도권 특정 폐기물 공공처리장 부지를 김포 매립지 내 수도권 3공구와 2공구, 시화공단 간 석지등 세군데에 분산 건립키로 잠정 확정했다.

이들 지역은 오는 3월이나 4월에 주민 투표를 실시, 80%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최종 확정된다.

환경처는 이날 그동안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난항을 거듭해 오던 수도권 특정 폐기물 공공처리장을 지역 발생 폐기물의 자체 책임처리 원칙에 따라 시도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 세곳으로 나누어 건립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북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특정 폐기물을 처리할때 제1처리장은 김포 수도권 매립지 3공구 15만평 부지에 설치된다.

또 인천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매립할 제2처리장은 10만평 규모로 수도권 매립지 제2공구에, 경기도 남부지역에 특정 폐기물을 버릴 제3처리장은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간석지에 10만평 규모로 건설된다.

이들 처리장의 연간 처리능력은 1처리장이 6만3천톤, 2처리장 7만1천톤, 3처리장이 17만7천톤이며 앞으로 20년간 매립이 가능하다.

재활용품 수거 지지체로 일원화

재생공, 구매·판매·비축 수행

정부는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시키기로 했다.

내무부는 지난달 10일 주민들로부터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하고 자원재생공사는 자치단체가 수거한 재활용품을 구매하여 공장에 판매하거나 장기 비축하는 기능을 전담토록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재활용품 수집업무는 자치단체와 자원재생공사에서 맡아 했는데 이로 인해 일관성 있는 시책 추진이 어려웠을뿐 아니라 인력및 장비가 이중으로 소요돼 행정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내무부는 금년 3월까지 1천3백10대의 수거전용 차량과 2백56대의 자치단체별 대형 선별창고를 확보키로 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 일원화는 이달부터 운반차량과 선별창고가 설치된 39개 시군읍부터 실시하고 4월까지 2백60개 시군읍으로 확대된다.

공진청, 품질혁신 주력기로

ISO 인증기관 11개 지원

공업진흥청은 올초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기술에 바탕을 둔 품질을 무기로 한 국가간 무한 경쟁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올해 품질혁신을 통한 공산품 국제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기로 했다.

공업진흥청은 이를 위해 금년을 품질혁신 원년으로 정하고 산업에 1사1혁신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제적인 품질보증 인증제도(ISO 900)의 본격 시행을 위해 11개 지원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80명의 국제심사원을 양성하기로 했다.

또 외국의 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 신제품 및 물류, 정보 등의 새로운 산업분야에 대한 산업표준 선진화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환경경영 표준화(TC207)작업 등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표준회의(IEC) 등 국제기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중기지원제도 대폭 개편

상공부, UR대비 경쟁력 제고 위해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폐지되고 무역금융 수출산업 설비 금융의 우대금리가 없어지는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상공자원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에 대한 후속조치로 공업기반 기술개발 공업발전자금 외화표시자금 등 1백여개 산업지원제도를 전면 재검토, 오는 6월 15일까지 개편방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를 위해 관련부서 및 경제단체 민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하는 산업지원제도 개편대책반을 발족, 첫 회의를 열고 UR에서 존치가능보조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제도를 선별해 중점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UR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보조금 해당여부로 논란을 빚을 소지가 있는 무역금융 수출산업 설비금융 등은 일반상업 대출과의 금리차이를 없애 공급하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운용도 UR규정에 맞도록 지방중소기업 육성이나 공동기술개발쪽으로 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출관련 금융중 공동 기술연수나 연구개발용도의 간접지원은 기존의 지원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